

농림부 수석수의사(CVO)에게 바란다 예리한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자(挫其銳 解其粉)

홍하일

농림부 수석수의사(CVO)인 김창섭 가축방역과장께서는 지난 10월호 『대한수의사회지』에 “수의발전을 위해서는 상생(相生)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수의사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제안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수의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수의계의 수많은 현안은 때로는 차가운 이성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뜨거운 가슴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지식이 날카로운 것이라면 덕(德)은 그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여 마음을 넉넉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자(老子)는 “예리한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어라(挫其銳 解其粉)”고 설파했습니다.

➤ “수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성찰적 질문

수의학은 동물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응용과학입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수의학은 인류에게 동물성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발전하였고, 현대에는 인간의 행복 추구가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되기 시작함에 따라 축산식품의 안전성과 인수공통전염병의 예방이라는 중대한 공중보건학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육동물이 아닌 인간의 친구로 존재하였던 동물들이 ‘가축’에서 ‘애완동물’로 바뀌었다가 다시 ‘반려동물’로 변모하면서 이들의 건강 역시 수의학의 필수적인 영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수 의학을 단순히 “축산업과 불가분의 공생관계”만으로 한정짓는 것은 수의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축소·왜곡시킨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부의 축적으로 인식된 현대의 축산업은 경제적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축산식품을 ‘동물농장’이 아닌 ‘동물공장’에서 기계가 물건을 찍어 내듯이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노래를 처음 배웠던 어린 시절부터 우리들은 소가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이라고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학에서 배웠던 수의학 교과서에도 소는 ‘혹위, 벌집위, 겹주름위, 주름위’라는 4개의 위를 가진 되새김질을 하는 초식동물이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상식은 결코 사실이 아니었

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자면 현대 축산업은 소를 초식동물로 사육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발전한 첨단 사육방식은 소가 태어나면 잠깐 동안만 어미젖을 먹고는 곧바로 소의 피로 만든 갈색 영양제를 이유식으로 먹고 있습니다. 소를 빨리 살찌우기 위해 일부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기도하고, 충분하지 않은 좁은 공간에 가두어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순리를 거슬러 육식동물로 사육되는 소는 당연히 많은 질병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양의 항생제와 호르몬제를 소에게 주사하거나 먹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돼지와 닭도 이와 같은 공장식 축산업 방식으로 사육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공장식 축산업은 광우병·주류인플루엔자등과 같은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대재앙을 불러 올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우리 수의사들은 생명존중의 정신으로 동물의 복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의사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농림부 수석수의사(CVO)는 현대 수의학의 이러한 철학과 이념을 바탕으로 수의정책을 입안할 필요성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 국민건강, 식품안전, 동물복지를 위하여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가 '자가사육동물 진료허용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제기에 대한 현재의 농림부 입장은 수리학을 단순히 축산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국건수의 헌법소원 취지는 모든 '자가진료'를 철폐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 등 수의사의 전문적인 처방이 필요한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자가진료를 철폐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농림부에서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를 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오남용 문제와 내성균 문제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라는 것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 10월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축수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연간 1천500톤으로 축산품 생산량이 우리의 1.2배인 덴마크(연간 94톤)의 16배"라며 "우리나라의 생산량 대비 항생제 사용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보고서에서 용도별 항생제 사용량이 배합사료 첨가(54%), 농가 임의치료(40%), 수의사 처방(6%)순이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호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수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동물용 의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생제, 호르몬제, 마취제, 백신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마구잡이로 구입할 수 없도록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기구(FAO)에서도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의사 처방제 등 다양한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과정에서도 OIE국제기준을 강조하였던 농림부가 유독 수의사 처방제에 대해서만 국제기준을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일선 수의사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

(SPS)협정에서도 '동등성 조항'에 의해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 기준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곧 우리 국민의 건강과 식품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제기준보다 엄격한 국내기준을 정할 현실적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 식품안전과 축산업 경영은 별개의 문제

산업동물 진료수의사의 부족과 진료비 부담에 따른 축산업 경영악화 등 식품안전과는 별개의 정책적인 문제를 이유로, 수십년 동안 수의사 처방제를 미루는 것은 식품안전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거꾸로 바뀐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개의 수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수의과대학은 고작 4개에 불과하며, 우리보다 인구가 6배가 많은 미국도 수의과대학은 28개 밖에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인구가 2배가 많은 독일의 수의과대학은 겨우 5개이며, 우리보다 인구가 2.6배 많은 일본도 수의과대학은 16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외국에 비해 과다 공급된 우리나라의 수의사들 중에서 임상에 종사하는 사람이 왜 겨우 36%에 불과하겠습니까? 수의대 졸업생 중에서 임상에 종사하는 비율을 보면 영국은 80%에 이르고, 미국도 65%에 달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수의사들이 법·제도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전문가로서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2005년 현재 우리나라의 임상수의사 3285명 중에서 30%에 해당하는 986명이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동물용 항생제 중에서 6%만이 수의사 처방에 의해 판매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산업동물 진료수의사는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며, 수의사 처방제도의 실시 등으로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충분히 보충될 만큼 수의사 배출은 과잉 공급 상태입니다. 또한 축산업의 경영악화에 대한 대책으로 가축질병공제 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은 식품안전 정책이 아니라 축산농가 지원·육성대책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생제 오남용 및 내성균 문제와 같은 식품안전 문제는 결코 축산업 경영악화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놓고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수의 임상의 70%를 차지하는 반려동물 수의사는 실제로 축산업 경영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점도 덧붙입니다.

FAO와 WHO는 2003년 「Assuring Food Safety and Quality. Guideline for Strengthening National Food Control System」을 통하여 국가 차원에서 식품통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별 단계나 수준에 따라 조직의 구조를 달리할 수 있다고 보고 크게 '다원기구형, 단일기구형, 통합체계형' 3가지 종류의 유형으로 나누어 소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식품안전체계는 다원형 체계로 업무의 중복 또는 공백, 책임의 회피, 인력 및 예산의 낭비, 기관 간 협조체계의 미비로 인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한 가운데 공무원 수의사 조직이 농림부 축산국 산하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품안전행정 일원화가 총리실 산하의 식품안전처가 되거나 농림부나 식약청으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공무원 수의사들이 능력을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CVO께서도 농림부 내에서 수의사들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리라 믿지만, 국가 최고위 수의직 공무원이 과장급이라는 현실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수석수의사(CVO)가 미국처럼 차관급 정도의 위치에 있거나, 독립된 수의중앙행정기관을 설치한 덴마크처럼 수의식품청(DVFA)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주의약품의 수의사처방에 의한 관리, 공무원 수의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의 보장은 국가 수의학 교육의 합리적 개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가 및 민간 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전제이며 이를 통해 안전한 축수산물 생산은 물론 동물복지의 구현에 있어 수의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사회적으로 전문가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본 제도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 상생을 위한 의사소통을 통해 얽힌 것을 풀어야

농림부 가축방역과장님께서 지난 8월말 농림부에서 열렸던 ‘동물보호법 관련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에 대해 인천시 수의사회를 중심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실과 한국동물병원협의회(KAHA)의 농림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일선 수의사들의 수의정책에 대한 무지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국민건강과 식품안전, 그리고 동물복지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일선 수의사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는 “역사를 돌이켜 봐도 자기 영역을 보존하기 위해 성을 쌓고 버티는 무리는 멸망을 자초하였고, 진취적인 사고로 업무를 개방하고 경쟁하는 무리는 흥하였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고 주장한 역사인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합니다. 의사, 변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등 전문직들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10월호의 원고 속에서 “수의사 업무 개방”이 정확히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불분명하지만, 혹시라도 ‘광범위한 자가진료의 허용’과 ‘수의사 처방제 불인정’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닐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의발전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위해서는 농림부와 일선 수의사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부 수석수의사로서 농림부와 대한수의사회, 국민건강을 위한 수의사연대, 그리고 일선수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수의정책토론회나 설명회, 간담회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호간에 의사소통 과정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예리한 것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 수 있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